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4~5면



민주노동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6면

멕시코 대선 부정선거 논란

8면

홍미정 교수 특별 기고

팔레스타인 3차 인티파다

8면

존 몰리뉴 칼럼

5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5호 2006년 7월 15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한미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반대 의견(45.4퍼센트)이 찬성 의견(42.6퍼센트)보다 많다. 전 대통령 정책실장 이정우 등 전현직 정부 인사들조차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가 뭘 믿고 FTA 협상에 나섰던 것인지, 또 협상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아무런 정치 작업조차 해두지 않았던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조선일보》 7월 10일치.)

대중적 설득에 실패한 정부가 경찰력으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공격하

고 있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정부 대표들의 밀실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 한미 FTA는 결코 미국과 한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도 아니고, 한미 양국이 국익을 놓고 벌이는 대결도 아니다. 한미FTA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일 뿐이다.

그 결과, 한국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사유화로 말미암은 요금 폭등과 서비스 질 저하와 대량해고를 겪을 것이고, 미국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브라질이나 한국의 임금 수준과 아주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전

에는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임금으로 환원하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굿이어의 생산 담당 부사장 출신인 스탠리 J. 미헬리크)는 미국 자본가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FTA에 맞서 한미 노동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저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크리스 나인햄

세계사회포럼과 유럽사회포럼
조직자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허영구

민주노동당 부위원장

아노야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홍미정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
팔레스타인 총선 감시 단원 활동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주간 〈맞불〉 편집자

... 등 60여 명의 연사들이
강연합니다.

베네수엘라 - 혁명 속의 혁명! 세계 반전 ·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략! 5 · 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
단일전선체의 정치학 - 공동전선인가 인민전선인가! 한미 FTA -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박노자가 말하는 한반도와 제국주의
이강택 PD가 영상과 함께 말한다 - NAFTA가 보여준 한미 FTA의 미래! 북한 사회 성격 논쟁 - 마지막 사회주의?

... 등 59개의 강연

한국 최대의 진보 포럼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기간: 7월 14일(금) ~ 7월 17일(월)

장소: 경희대학교 주최: 다함께

참가신청: 전화 02-2271-2395

인터넷 신청 www.marxism.or.kr

오른쪽으로 가는 김근태의 열우당

한나라당 수구 꼴통들이 ‘사상 검증’ 시비로 소동을 벌이는 동안 ‘짜퉁’ 한나라당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열우당은 “한 달 동안의 반성” 끝에 하반기 경제계획을 내놨다.

“반성을 마친” 열우당은 양쪽 지지기반 모두의 환심을 사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느니 왼쪽에서 확실하게 발을 빼 우경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한편으론 서민경제를 위해 88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지출해 경기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가 하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고 “죽어도 후퇴는 없다”던 부동산 정책에서도 재산세·취득세·등록세·거래세를 모두 내리기로 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 정

책이다. 그리고 수십조 원의 재정 지출은 대부분 세금 감면과 기업도시 건설, 민자유치사업 확대, 서울 강북 개발, 민자고속도로 건설, 거래세 완화 등에서 생길

투기 세력 대변하는 열우당은 퇴장하라
세입 감소분을 메우는 데 쓰일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곤 고작 태권도장 수업료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전부다. 결국 2004년 이헌재가 “한국형 뉴딜”

계획을 제출했을 때처럼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과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정책이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때와 똑같이 진정한 혜택은 기업주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양극화 해소’에서 급선회 … 여당 주도 강력한 ‘경기 살리기’”라며 칭찬을 할까!

게다가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수용한 대신 김근태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약간의 비판까지 거두었다.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 처리에 온 힘을 다한 것도 열우당 이었다.

서민 경제를 살린답시고 LG출신 오해진과 현대 출신 이계안을 서민경제회복 추진위원회에 앉혀 놓은 김근태와 열우당은 앞으로 더 ‘진짜 같은 짜퉁’ 한나라당의 길을 갈 것이다.

장호중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의 위험성

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론이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7월 8일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소기업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은 고사하고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노동 중심성을 제거하고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이 중소 상공인의 정당”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결과의 교훈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주를 포함한 “광범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육성론자들은 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주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흥 없는 비정규직 해결은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창현 씨는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문제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임을 가리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면 충돌한다.

충돌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서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주들은

이런 불공정 거래의 부담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익을 유지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계열화돼 있는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주들은 근본에서 대기업주에 반대할 수 없다.

이렇듯 중소기업 육성론은당을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으로 바꾸고 집권을 위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억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정구

인용해도 될까요?

“한때 공산혁명을 꿈꾸었던 사람[이재오]이 당의 대표가 되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당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의문 … [‘골수보수로 가자는 것이냐?’는] 이명박 전 시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좌파로 가자는 겁니까? 공산혁명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한나라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규택의 거침없는 색깔론

“연합군이 이라크 거리의 안전을 지킨다 … 병사들이 수색 중에도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함으로써 쌍방이 근본적 신뢰를 쌓아 왔다.”

—3개월 전 이라크 미군 홍보지 1면에 실린 스티브 그린(15살 소녀 강간과 일가족 몰살 사건의 주범) 관련 기사 중에서

“이번 통화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부시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가진 첫번째 전화 통화”

—노무현이 부시와 맨 먼저 통화한 게 자랑스러운 청와대

“나는 환경운동가다. 이런 분들[고건, 정몽준, 오세훈]을 조직하지 않으면 누구를 조직할 것인가?”

—재벌 총수와 보수 정치인들이 주된 조직대상이라는 최열

‘공동투쟁본부’는 투쟁을 조직해야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비정규 법안 재논의와 노사관계로드맵 대응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재논의’를 내건 것도 꺼림칙한데 ‘공동투쟁본부’는 9월 국회 전까지 비정규직 법안 수정안 마련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족할 양보 교섭안을 만들자는 계획인 것이다.

‘공동투쟁본부’가 아니라 ‘공동협상본부’인 셈이다. 정말 공동투쟁을 위한 기구라면 9월 국회를 대비한 투쟁 건설 계획을 주요 사업으로 정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태도는 유감이다.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씩씩이’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하지는 않고 협상 치

중에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성북을 보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박창완 후보의 후원회장은 비정규직 투쟁을 배신한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비정규직 수정안 마련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바랄 수 있겠는가.

전지윤

‘연대기금’보다는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6월 말에 발표된 민주노동당 ‘당 혁신 특별위원회’의 혁신안은 핵심 지지계층전락으로 비정규직의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기업계, 정부 등이 공동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비정규직 보호에 당이 정치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나서서 사회

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동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낳아 노동자들의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도”할 수도 없다.

혁신안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의 구체화 및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권영길 원내대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 ‘노동계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과 연결해 본다면 애초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법안’에서 후퇴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혁신안에는 어떻게 투쟁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 투쟁 건설보다 협상에 의존하며 거듭 후퇴하던 자세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 투쟁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적극 나설 때, ‘비정규직 보호’도 가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한미FTA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정확히 말해 ‘규제 없는 국제 교역’이다. 이 때 규제 폐지는 자본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장벽 일체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려 한다.

그렇게 봤을 때, 한미 양국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 — 쌀 개방 등 — 보다 한미 양국이 악수한 분야 — 공공서비스 사유화, 공공 제도 파괴, 노동기본권 축소, 광우병 쇠고기 도입 같은 식품안전 위협 등 — 가 진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로, 한미FTA를 쌀과 영화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매우 협소하다. 오히려 노동계급 전체의 경제적·정치적 삶이 걸린 문제다.

WTO의 모태가 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쌀 문제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운동은 국제 반WTO 운동에 매우 곱뜨게 반응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는 GATT(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가 포괄하지 못하는 비제조업 분야 — 보험·건강·교육·건축·회계 —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역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미국 금융 산업들 특히 아메리칸익스프레스나 시티코프 같은 회사들의 엄청난 압력이 없었다면,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도,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도, WTO도 없었을 것이다.”(전 WTO서비스국장)

한미FTA는 WTO가 만족스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운동의 협소한 이해를 이용하려는 듯하다. 정부는 쌀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품목으로 설정하겠다고며 버티고 있다. 쌀이 한미FTA 반대 운동의 초점이 될 경우 자칫 정부의 분열 술책에 말릴 우려가 있다.

전략

운동 일각에는 FTA 같은 세계화 대세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도 세계적 대세가 됐다.

2005년 11월 FTAA를 좌초시킨 라틴아메리카 운동 – 우리도 이렇게 하자

자본의 세계화는 저항의 세계화를 낳았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투쟁들은 서로를 감염시키고 있다. 치아파스와 시애틀은 세계적 반향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거대한 CPE 반대 투쟁은 그리스 학생 운동을 고무했고, 그리스 학생 운동은 우파 정부를 굴복시켰다. FTAA(미주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 등 라틴아메리카 운동들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세계 민중에게 이정표가 됐다.

7월 협상을 저지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는 조급증도 피해야 한다. 이런 조급증은 종종 대중과 괴리된 ‘소수파’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중을 대리하는 ‘소수파’ 행동은 “현장 노동자들이 왜 FTA를 저지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7월 1일 ‘한미FTA 저지 활동가 긴급 토론회’에서 한 부산 활동가가 한 말)을 고착시킬 뿐이다.

오히려 7월 12일 시위 규모를 되도록 크게 만들고, 이를 현장 노동자들 속으로 더 깊고 더 넓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운동이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운동 안에는 한미FTA가 아니라 (또는 한미FTA 이전에) 한중FTA 등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좋은’ FTA와 ‘나쁜’ FTA를 나누는 것은 ‘좋은’ 신자유주의와 ‘나쁜’ 신자유주의를 나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요하는 국제 압력에서 벗어나 진보적 국내

정책과 국가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가 경제 주권 수호론).

실제로, WTO·IMF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이나 자유무역협정이 자본의 편에서서 국제 경제를 관리하고 자본의 세계화 과정을 가속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공공서비스가 공격받을 때, 우리는 방어해야 하고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진보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그런 서비스를 공급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부자들의 부와 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석유·가스 시설 국유화 조처를 지지해야 하는 까닭이다. 사실, 이 산업들의 국유화는 우파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를 쫓아낸 2005년 5~6월 민중항쟁 당시 핵심 요구였다.

그러나 국가 산업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기본 동력 — 존재하는 것을 모두 상품화하기 — 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계획 경제 — 사회주의 — 를 진지하게 의제에 올려놓아야 한다. 물론 옛 소련의 몰락 때문에 계획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정확하게 말해 관료적으로 중앙집중화한 명령경제였다.

사실, 계획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 경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다수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으로 재조직될 수 없다.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미국에 맞서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함으로써 대안적인 경제 조직 방식 문제가 의제에 올라 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인식

함께 읽을 소책자

한미FTA에 맞선 투쟁과 대안

다함께 지음 | 3,000원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맞장을 뜨자

장애인, 노숙인, 빈민, 일용직 근로자 및 이주노동자 … 이들은 모두 가진자들과 권력자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사회적 낙오자가 돼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이 세상!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지역에서 살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구조는 분명 잘못이며 차별과 억압으로 얼룩진 죄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된 것들을 향해 우리 모두 “다 함께” “맞장”을 띄시다!!!

정만훈(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맞불>을 정기 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부른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일본·남한의 지배자들은 위선적인 호들갑을 떨고 있다. 부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화물선의 6개월 간 입항 금지 등 9개항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남한 우익들도 마찬가지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 신뢰”(〈조선일보〉)가 북한으로 하여금 “깡판을 치게 했다”(한나라당 김용갑)며 ‘대북유화책’을 문제 삼았고, 정부가 능장 대응했다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도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일부 장관 이종석은 북한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겠다고며 비료와 식량 지원을凍결했다.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5자회담을 열자”며 북한에 대한 ‘궤석 재판’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이 정해 놓은 동북아시아 제국주의 질서에 근본적으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남한 지배자들 사이의 합의인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다. 북한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내려 했던 듯하다. 지난 6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한성렬은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무관하지만, 미국이 최소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동결자금을 풀어야 회담에 복귀”하겠다고며,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9·19 베이징 성명서의 일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파탄냈다.

이번에도 미국은 상투적인 협상 파기 방식을 사용했다.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갑자기 새롭지도 않은 마약·위조지폐 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단행했다.

애초, 미국이 6자회담을 제시한 것은 이라크에 발목잡힌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시간벌기용’으로만 활용했다.

북한은 국제적 반자금세탁

활동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며 양보 의사를 보였지만 미국은 뒷방귀도 끼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 이후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만 준비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34호〉)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라크 하디타 학살, 판타나모 수용소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이란과 직접대화 약속을 한 바로 다음인 지난 6월 1일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을 초대했다. 그러나 부시는 “우리는 북한 정부와 양자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미련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악의적 무시’는 계속됐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결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에서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클린턴 정부에 몸담았던 윌리엄 페리 같은 자들이 “선제 공격”을 운운하지만,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으로서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나 부시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책”이 ‘유화책’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유엔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북한 제재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한다. 물론, 중국이 일관되게 미국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해야 하는 모순적 처지에 놓여 있다.

부시는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겠지만 중국과의 세력균형과 이라크·이란 등 중동 상황을 봤을 때, ‘현상 유지’ 정책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 ‘현상유지’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뜻할 것이고 북한에게는 괴로운 나날들이 될 것이다.

MD와 군비경쟁

북한이 한때 발전하던 공업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과장이자 위선이다.

미국은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해 왔고, 7월 9일 인도가 핵탄두 탑재용 장거리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을 때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인정했다.

무기통제협회(ACA) 대표 대릴 킴볼은 “지금으로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대포동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1천3백 킬로미터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재진입기술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갖춰야 할 기술 수준에서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부시는 지난 8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진 것은 왜 MD가 필요한지를 보여 줬다”며 MD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자마자 이지스함 배치 등 MD체제 가동을 위한 첫 실천 경험으로 활용하려 했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군국주의적 야심을 한층 더 드러내고 있다. 일본 외무상 아소 다로는 “김정일에 감사한다”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자위권의 범위”라고 말했다.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 삼는 것도 위선이다. 남한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주범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KDX-3는 최신에 이지스함으로 설계된 것이고 언제든지 미국과 일본의 MD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게다가 남한은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급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미 수십 회도 넘게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 왔다. 〈아메리칸진보센터〉의 조셉 시린시온은 “북한의 위협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에 의해 부풀려졌으며, 이에 따라 MD개발에 드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D가 사실 중국을 겨냥한 점이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 미사일은 이를 위한 빌미일 뿐이다.

고하되 …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일단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금지선을 정하라’는 충고는 제국주의적 압박을 용인하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제국주의 국가간 협상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다

면 지금까지 왜 솔한 합의와 결정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돼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금지선

7월 6일 발표된 민주노동당 논평은 남한 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서지 말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북한에 대한 유감은 표명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압박을 폭로하지는 않았다.

서총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제국주의를 향한 자주 민족의 최후통첩”이며 “현재 정치·군사적 정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북측”이라고 주장했다(〈경제분석〉).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이들의 과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5월 김창현 전 민주

노동당 사무총장은 한총련 주치의 ‘5월 한마당’ 강연회에서 “북발사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경

존 몰리뉴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지피지기’(知彼知己)라는 말은 오래되고 유익한 격언이다. 노동계급 운동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 농민, 학생, 지식인 등등 — 의 적(敵)은 자본주의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운동 안에는 흔히 아주 모호한 자본주의 개념이 널리 퍼져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배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저급 언론부터 명문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혼란스런 개념을 널리 유포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폐지하려는 생각을 꿈도 꿀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가 영원불멸의 체제 — 인간 본성의 문제 — 인 양 여겨지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들은 자본주의를 인간의 특성, 즉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간만큼 오래된 ‘탐욕’이나 약 5천 년 전에 출현한 ‘화폐’나 약 1만 년 전에 출현한 ‘사유 재산’과 동일시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특히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자본주의의 결과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이 자본주의에 때로는 매우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칼 맑스의 많은 지적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현했으며,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근본 동역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가 어떤 태도나 관념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 체제, 즉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처음에 자생적으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출현했다.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중세 후기에 그 전의 생산양식, 즉 봉건제 안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과거에도 상품 생산 체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상품은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 제품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도 상품이 되고 임금노동이 주된 노동 형태가 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하는 것은 자본이다(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자본은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에서 그 가치를 증식시킬 목적으로 임금노동을 착취하는 데 사용되는 축적된 부(富)다.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사회관계다.

임금노동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했을 뿐 아니라 자본 소유자들, 즉 자본가들,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는 정치 권력도 장악해야 했다. 그들은 처음에 16세기 네덜란드 혁명과 17세기 영국 혁명에서 그렇게 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뒤에 자본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거의 모든 곳을 지배한다.

이런 기본적 특징들을 보면, 자본주의가 왜 봉건제보다 더 진보적인 체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임금노동은 그보다 선행했던 노예·농노·농민들의 노동보다 — 인간의 자유, 생산성, 혁명적 잠재력의 관점에서 보면 — 진보였다.

둘째, 자본가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과거의 봉건 영주나 다른 지배자들의 통치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규모로 생산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특징들은 모든 비인간성·불평등·경제위기·전쟁·[환경]파괴의 씨앗도 품고 있다. 그런 것들은 자본주의 역사의 특징이었고, 그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의 전복이 그토록 절실한 것이다.

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제의 발전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세상이 됐다. 자본가들은 할 수만 있다면 허공의 공기도 판매할 것이다. 노동력도 상품이 되다 보니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서, 그리고 자신이 노동해 만든 생산물에서 소외된다. 그 때문에 노동은 무의미한 고역이 되고 노동자들은 기계(와 사무실)의 부속품이 된다.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 고용은 착취 과정이고,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기력이 쇠하고 불평등은 더 심해진다.

자본들 간의 가치없고 통제되지 않는 경쟁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해, 기업들이 부도나고 생산이 감소하고 대량 실업과 빈곤이 잇따른다. 똑같은 경쟁 때문에 더 크고 강력한 기업들이 더 작고 약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자본과 생산이 점점 더 소수의 거대 기업들 손에 집중된다. 이 기업들 간의 경쟁 — 자원(석유)·시장·노동력·투자자를 위한 — 때문에 점점 더 잔인한 경쟁들과 끔찍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 사회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오해 두 가지는 자본주의를 1) 사적 소유와 동일시하거나 2) 자유 시장과 동일시한 것이었다. 두 경우 모두 체제의 중요하고 때로는 유력한 특징 하나를 체제의 본질 자체와 동일시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독일 사민당이나 영국 노동당 같은)은 자본주의 국가가 국가 소유와 국가 계획을 확대하면 자본주의를 점차 폐지하거나 적어도 자본주의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틀렸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혼합이었을 뿐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은 국가 소유와 국가 계획이 거의 절대적인 나라들(옛 소련과 중국 등)이 사회주의 사회였다고 믿었다. 비록 그런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도 국가도 통제하지 못했고 임금노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국가가 나머지 세계 자본주의와 경쟁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스탈린주의자들도 틀렸다. 특권적인 국가 관료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억압 체제였을 뿐이다.

오늘날 반(反)세계화 운동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만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가 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히드라의 여러 머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머리를 자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머리들에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

결국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노동자들 스스로(생산수단들) 소유하고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전에 부르주아지가 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요약했다. “자본주의의 사슬은 그 사슬이 버려진 곳에서 끊어져야 한다!”

영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인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을 격조로 연재한다.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비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의 진로를 둘러싼 토론을 회피하다

7월 8일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이후 당의 향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점을 예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고 안건으로 제출된 당 혁신안은 당의 핵심 지지 계층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인이라고 명시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현대기금을 모으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내자고 돼 있으며, 상설연대체 건설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혁신안은 토론되지 못했다. 문성현 당 대표는 내용을 보완하겠다고며 다음 중앙위로 넘겨버렸다.

상설연대체 문제가 보고 안건으로 처리된 것 자체도 유감이다. 나는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의 역할 분담론과 계급연합 전략을 지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가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보고안건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상설연대체에 관한 여러 입장을 놓고 전당적인 토론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다함께’의 상설연대체 관련 대자보와 리플렛에 많은 중앙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지방선거 평가보고서에 대해 몇몇 지적 — “2004년 총선에 비해 줄어든 50만 명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이승민 중앙위원) — 이 있었지만, 크게 토론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9월 중앙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민생경제 회복 사업, 한미FTA 대응사업, 대선 준비 사업, 당 혁신 사업, 산별노조와의 연대 사업이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결정됐다.

김혜련 중앙위원은 반제반전 실천사업 — 자이툰 철수, 이란 확전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 을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정미 중앙위원이 이 수정안을 반대했다. 한미FTA 저지에 반기 투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한편, 나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사업 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기업 횡포를 폭로해야 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계열화돼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을 제시한다 해서 중소기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3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당원 규정 중 당우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것 — 당우의 당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 은 매우 아쉽다.

공무원·교사 당우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지도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김선동 사무총장은 그렇게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민 중앙위원은 안전한 보호책도 아니라면 정당법이나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악법을 우회하기보다 교사·공무원 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자고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지방자치위원회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내용 중 “지방 선출공직자는 해당 소속

당조직에 활동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는 항목이 있는데 이승민 중앙위원은 “승인”도 받게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경기군포의 송재영 중앙위원과 경기안산의 노세극 중앙위원 등이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진보적 희망을 향한 민주노동당 대국민 다짐’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 결의문에는 한미FTA 저지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담겨 있었다. “비정규직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은 실현 가능한 중소기업성장전략과 자영업 구제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이 결의안은 다행히도 부결됐다.

당 대표 결선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자는 안건은 다행스럽게도 통과되지 않았다.

‘전진’을 포함해 당내 좌파를 자처하는 중앙위원들이 이 안건을 지지한 것은 유감이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 검찰은 민주노동당에게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부르주아 언론은 자정 능력 없는 진보정당 운운하며 공격을 해댈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이용해 당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김여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지역 사회포럼 :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남부지역
8월 23일(수) 저녁 8시
전교조 서울본부(7호선 이수역 7번 출구)
연사 : 김여진(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문의 : 010-6495-9925
참가비 : 1천 원

동부지역
8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연사 : 김여진(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문의 : 019-9731-7299
참가비 : 2천 원

중부지역
8월 24일(목) 저녁 8시
명동향린교회(명동성당 앞 골목)
연사 :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의 : 019-647-3309
참가비 : 2천 원

대학 맑스주의 포럼은 대학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9월 포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010-2752-2003, atgstudent@hanmail.net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직장, 학교, 지역사회의 투쟁 소식과 사진들을 보내 주십시오. 다음 호 기사 마감은 7월 15일(토)입니다.

서울에서 울린 팔레스타인 연대의 함성

7월 10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공격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다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경계를넘어’,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가했다.

김용민 <맞붙> 기자는 “군사 공격의 목적이 길라드 살리트 상병의 구출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점령과 억압을 강화하고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집회는 중동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항의 물결의 일부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



엘의 공격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2차 인티파다 6주년이 되

는 9월 24일 반전 시위에 참가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진

악행을 숨기려 협박까지 한 외대 당국

외대노조와 ‘다함께 외대모임’이 리플릿과 대자보, 현수막 등을 통해 6월 26일 있는 보직교수들의 폭력·성희롱 추태를 알려나가자, 학교는 노골적으로 ‘다함께 외대모임’을 입막음하려 했다.

소병국 총무처장은 뻔뻔스럽게 다함께 회원에게 전화해 “노조는 성희롱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왜 떠드느냐”고 거짓말을 하며 노조와 ‘다함께’를 분열시키려 했다. 뿐만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다함께 외대모임’은 다음 날 신속하게 리플릿을 통해 학교의 전화 협박을 폭로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총무처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 날 교섭에서 학교는 노동조합에 “2주일 동안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협상할 것을 제안했고, 노동조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학교의 제안은 노동조합을 발목 잡아 보직교수들의 폭력·성희롱 추태가 부각된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명훈

따라서 노동조합은 폭력·성희롱 추태를 사과할 때까지 교섭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학교를 더욱 궁지에 몰 필요가 있었다.

학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직후,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다함께 외대모임’의 현수막을 모두 떼어 버렸다. ‘다함께 외대모임’은 앞으로도 이런 학교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조명훈

옥중 단식 투쟁중인 구속노동자들

구속노동자들이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에 연대하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영등포교도소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청주교도소 김용직(민주

노총충북본부 조직부장), 순천교도소 박정훈(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동지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10일부터는 대전교도소 엄기준(유성기업노조), 구재보

(세원테크지회) 동지가 이틀간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극렬해지고 있는 노무현의 탄압으로 구속노동자 수는 7월 6일 현재 58명에 이른다. 밖에서는 투쟁의 선봉에 섰고 감옥에 갇혀서도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구속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청하

비정규직·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외쳐 온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해외자본 유치’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알고 싶다면 이들을 보라! 지난 7월 6일 코오롱, 오리온전기, 기륭전자, KTX여승무원, 하이닉스-매그나칩, 전국학습지노조, 레이크사이드CC 등. 짧게는 1백 일에서 길게는 5년 넘게 투쟁해 온 비정규직·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들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광화문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

합을 만들어 처절하게 투쟁해 왔지만 무자비한 탄압이 뒤따랐을 뿐이다. 게다가 주춤하던 손배 가압류 청구액도 2005년에 4백5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수직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 88퍼센트가 비정규직·장기투쟁작업장에 집중돼 있다.

비정규직·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들은 정부의 “시혜”따윈 원하지도 않는다. 피와 땀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지금 노무현 정부와 대화할 게 아니라, 맞서서 강력히 투쟁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유청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들의 연대 문화제

올 8월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맞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강제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이 연대하는 투쟁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Unite & Struggle with Migrants WELCOME FESTIVAL(‘이주노동자와의 연대와 투쟁을 위한 문화제’)

일시, 장소 : 7월 23일 (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주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BNS(방글라데시), 버마액션, 카사마코(필리핀), ICC(인도네시아), NCC(네팔)

그 동안 주류 한국 사회한테서 배척당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하며 함께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문화제는 8월 13일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맞아 벌이는 도심 집회를 대규모로 조직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다.

산별노조는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산별노조 전환 투표가 성공한 이후에 산별노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대체로 산별노조를 못마땅해 하지만, 지배자들 내에서도 산별 전환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현대차 사측은 이번 투표에 거의 아무 방해도 하지 않았고, 노동부 장관 이상수도 “이런 [산별 전환] 흐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 쪽 브레인들인 김금수나 박태주도 산별 전환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은 산별노조가 “노사갈등 요인의 기업 외부화” 등 “사용자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다

했다. 박태주는 산별노조가 “파업의 감소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낳을 수 있도록 “[노동계가] 투쟁이 아니라 사측과의 타협을 중심

에 놓으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라고 주문한다. <중앙일보>도 “파업에 들어가려는 조종사노조를 극구 말렸”던 오스트리아 운

송산별노조를 모범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산별노조가 상층 지도부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투쟁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있다.

배신자답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산별노조를 투쟁일변도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파’ 이론가인 윤효원은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파업의 조직과 실행에 그만큼 더 신중하게”되며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임금 동결 혹은 삭감)”도 가능해진다고 썼다.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도

“[산별 교섭이 잘 되면] 더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 사용자의 부담이 오히려 덜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서울대병원 파업이 보여 줬듯이 산별노조 지도부가 협상에 치중하며 현장의 투쟁을 외면한다면 산별노조에 대한 기대는 커다란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기업주들의 처지를 걱정하며 양보 교섭으로 일관하던 미국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20년 만에 조합원수가 반토막 났다.

최근 현대차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가 통보됐다. 이런 공격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것과 산별노조 건설이 분리돼선 안 될 것이다.

전지윤

팔레스타인

3차 인티파다가 시작되다

홍미정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휴전 제의를 거부한 지난 8일, 나는 팔레스타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라말라에 사는 친구 마흐

무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식량은 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저께 가자지구에서 22명이 죽었다. 어제는 8명, 오늘은 지금[저녁 7시]까지 5명이 살해됐다. … 오늘로 가자지구의 식량은 바닥났다. 이집트를 통해 식량을 들여오려 하지만,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는다. … [하지만]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살해 위협에 맞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인 듯하다. 이따금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낙담한 내가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말하면, 내 팔레스타인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이 땅은 내 고향이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내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로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추방과 학살 정책에 맞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의 인티파다[‘불기’라는 뜻]가 시작됐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팔레스타인 경제는 지금 거의 마비상태고,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이것은 젊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결

국은 불타오르는 3차 ‘인티파다’에 기름을 붓고 있다.

붕괴

1987년 12월에 시작된 1차 인티파다는 1988년 하마스 창설, PLO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선언’, 1993년부터 시작된 ‘오슬로 협상’을 이끌어냈고, 그 뒤 오슬로 협상은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창설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실 이 협상 동안 이스라엘은 정착촌 확대, 검문소 설치, 관통도로 건설 등 공세적 점령 정책을 강화했고, 협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2000년 최종 지위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요구는 무산됐다.

요컨대, 1978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 프로그램들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커녕 ‘점령지 전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2004년

야세르 아라파트의 죽음 이후 2005년 1월 마흐무드 압바스가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뒤에도 이스라엘은 더 공세적인 점령 정책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더 옥죄었다.

2006년 1월 총선에서 ‘점령지 전역’, 즉 동예루살렘·서안지역·가자지구에서의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프로그램’을 내세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대중의 큰 지지를 받으며 승리한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의 결과였다.

하마스 정부 이전까지 협상 프로그램은 미국의 후원 하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왔다. 반면, 이제 하마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올려놓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투쟁보다는 하마스의 협상 프로그램이 공론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 정부를 붕괴시켜 협상 시도를 좌초시킴으로써 지금껏 추진해 온 점령 정책을 지속하려 하고 있다. 아랍의 권위주의 정부들 역시 하마스 정권이 자국 내 반정부 세력인 이슬람주의자들을 활성화시킬까 봐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살라트 상병 구하기를 빌미 삼은 ‘집단적 보복’, 그리고 그에 협력해 세계 열강들이 강요하는 굶주림 속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세계인들에게 도움과 연대를 요청하며 3차 인티파다를 시작한 것이다.

홍미정 교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멕시코

40만 명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멕시코 대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7월 8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 민주혁명당(PRD) 후보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자 40만 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표를 요구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표 집계에서 제외된 3백만 표, 오브라도르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의 투표함들이 사라졌다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점, 1988년 대선 때 부정선거에 사용된 전산 시스템이 이번에도 사용된 점 등 부정선거 의혹이 짙다.

1988년 대선 당시 제도혁명당(PRI)에서 뛰쳐나온 과우테목 카르데나스는 중도좌파 선거연합 민족민주전선(FDN)의 후보로 출마해 사실상 승리했으나 PRI의 부정선거 때문에 승리를 빼앗겼다. 이듬해 카르데나스를 비롯해 PRI를 탈당한 인사들이 공

산당·통합사회당·사회당 등 소규모 좌파 정당들과 손잡고 만든 중도좌파 포폴리스트 정당이 바로 PRD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순순히 승복하고 물러선 카르데나스와 달리 이번에 오브라도르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소칼로 광장에 집결하라고 호소했다.

물론 오브라도르의 대중 시위 호소에는 기존 사회운동의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이미 7월 5일에 PRD의 고위 간부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대단하다”며 오브라도르가 “지도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매우 강력한” 시민 운동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오브라도르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지금 멕시코 민중은 18년 전처럼 또다시 민주주의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한편, 주류 언론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바람이 꺾였음을 보여 주는 것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주요 정당들의 득표율 변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득표율

2000년 대선에서 현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은 42퍼센트를 득표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35퍼센트를 득표했다. 6년 전 36퍼센트를 득표했던 PRI는 이번엔 22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PRD는 16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상승했다.

공공연한 신자유주의 정당들(PAN과 PRI)의 득표율이 6년 사이에 21퍼센트 감

소한 반면, 중도좌파 정당 PRD의 득표율은 갑절 넘게 상승한 것이다.

물론 PRD와 오브라도르의 신자유주의 반대에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 무상의료·무상교육,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 등 신자유주의를 거스르는 정책·공약을 주창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멕시코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층인데도, 세계 1백대 부자 중 12명이 멕시코인이다. 이런 엄청난 불평등과 심각한 빈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 7월 8일 소칼로 광장 집회에 참가한 농민 벨라스코 크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빈민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에 신물난다.”

요컨대, 이런 경제적·사회적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이번 대선에서 신자유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하락과 PRD의 약진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수현